

불교대학 양분 배경과 문제점은...

조계종 인가를 받은 50개 불교대학으로 구성된 불교대학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이에 대응해 29개 불교대학들이 구성된 불교교육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서로 맞서고 있다. 협의회는 조계종 포교원이 제정, 공포한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에 따라 종단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불교대학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연합회는 시행령에 반발한 불교대학들이 동산불교대를 주축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협의회 소속 불교대학에는 약 4천여 명의 불

자들이 등록돼 있고 연합회 소속 불교대학에서는 약 3천여 불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불교대학의 양분화는 2002년 2월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두 단체 간의 대립은 올 1월 연합회가 자체 포교사 고시를 실시하고 포교사 양성에 들어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 체계가 굳어지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불교대학인가'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조계종 '신도전문교육 시행령' 이 불씨

양분된 이유

조계종이 2002년 2월 제정, 공포한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은 상당수 불교대학들의 반발을 샀다. 이 시행령은 전문교육기관 인가요건을 ▲1년 이상의 학제 ▲4명 이상(조계종 승려 2인 이상 필수)의 교수 ▲30명 이상의 입학정원 ▲학생 1인당 1.33제곱미터 이상이 강의실 확보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불교대학 전반에 대한 포교원장의 지도 감독과 학사 관리 및 회계에 대한 정기 감사 및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에 따라 인가를 받은 불교대학은 지난해 6월 협의회를 구성했다. 반면에 동산불교대학, 보현불교대학, 금강불교대학, 사르나트불교대학 등은 조계종 승려 2인 이상 확보와 1인당 일정 기준의 강의실 확보 등의 조건에 대해 불교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규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불교대학 운영에 대한 포교원의 지도와 감독, 정기 감사와 보고 규정에 대해서도 예산을 비롯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운영 간섭만 하겠다는 것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논리라고 맞섰다.

연합회는 "무조건 조계종에 맞추어 따라오라고 주장한다. 조계종은 '신도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신도교육을 기본-전문-지도자-재교육 체계로 정하고 종단에 독특한 불교대학을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않으면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을 제한받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활동 무대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자체 포교사 고시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밖에 없으며, 연합회



불교대학 이원화 체계가 굳어지면서 불자교육과 포교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올해 1월 열린 모 불교대학 신입생들의 발우공양 모습.

연합회

“불교대학 자율·특성 외면한 규정” 반발

포교원의 지도·감독·감사 사유권 침해

포교원

90년대 이후 신도교육체계 꾸준히 정비

부분 보완 가능하나 전면 개정은 불가

문제점

포교사 배출창구 이원화·위화감 큰 문제 커리큘럼 달라 교육·포교 혼선 가능성 신입생 확보 어려움... 존폐위기 내몰려

는 그런 취지에서 구성됐다고 말한다.

반면 조계종 포교원은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이 90년대 이후 꾸준히 신도교육 체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수정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문교육의 체계를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불교대학 양분의 문제점 불교대학이 양분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은 포교사 배출 창구가 이원화되는 것이다. 또 연합회와 협의회를 졸업하고 활동 중인 포교사 간의 위화감, 어떤 불교대학에 등록하고 어떤 포교사 고시를 볼 것인가에 대한 불자들의 고민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136명이 배출된데 이어 앞으로 연합회 포교사가 적극 활동을 하게 되면 기존 협의회 출신 포교사와 연합회 출신 포교사가 포교현장에서 부딪치게 된다. 또

한 협의회와 연합회가 서로 다른 커리큘럼으로 포교사를 양성하고 있어서 불자교육 및 포교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 동안 조계종 포교사의 한 축을 구성했던 동산불교대 등 연합회 불교대학 출신 포교사들은 후배들이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반 불자들이 어떤 불교대학에 가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한쪽 소속 불교대학에 다니는 불자들이 다른 쪽 포교사 고시를 봐야 한다면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불교대학 간의 대립은 불교를 공부하고 불법을

알리겠다는 불자들에게 실망과 함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조계종 등록 불교대학 중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 받지 못한 불교대학들이 포교사 고

시 응시자격을 제한받음에 따라 신입생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존폐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도 큰 문제점이다.

양측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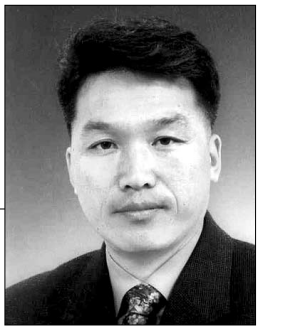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한 대립 양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계종은 연합회 소속 포교사는 물론 연합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계종 포교사의 포교활동을 침해할 경우 종단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연합회는 불교다도포교사 등 포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계속해 활동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두 단체간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불교대학의 위상과 신뢰성 저하는 물론 불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안신권 나눔의 집 사무국장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망

12년간 日사죄 요구 544번째 시위 “다시 태어나면 나라지키는 군인...”

92년 1월 8일 첫 수요시위. 오늘도 변함없이 할머니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있다. 지금까지 12년, 횡수로만 544번째다. 세계에서 최장기 시위이자 가장 평화적인 시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말 일본군이 자행한 한국 여성들의 대규모적인 성수탈 전도를 밝히고, 그 밝혀진 진상에 따른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정부 차원의 책임자 처벌 등을 할머니들은 그 긴 세월을 하루같이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반성 없거나 오히려 '아시아 여성을 위한 평화 국인 기금'이라는 기만적인 술책을 동원하여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의 배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도덕성으로 피해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각료들의 망언, 한국을 비롯한 주변 피해국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본교과서 왜곡,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랜 세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명예회복을 위한 중단 없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를 꿈꾸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회피하는 일본 사회에 진실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 또 먼 훗날 일본인의 후손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말해주는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떠나 전쟁 중에 발생한 여성의 성차별적 문제

이기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지구상에서 이러한 과오가 발생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하루속히 과거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한국정부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2003년 새해를 맞아 우리 피해자 할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9월 '나눔의 집'을 방문했던 일본 민주당 오키자키 토미코 여의원의 '수요시위' 방문이었다.

현재 오키자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위한 법안을 2년 전부터 마련 중이며, 252명 참의원 중 86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 법안은 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에 대해, 국회 결의를 거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일본 정부의 금전적 배상,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추진위원회 조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필리핀·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한국 국회의원 110명에게도 법안 지지 서명을 일본 참의원 의장에게 전달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전쟁을 반대한다. 모든 것을 전쟁에서 잃었기 때문이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전쟁의 참혹함을 현장에서 몸서리치게 경험했기에 그렇다. 자신의 아픔을 극복해가며 발전시위에 나서서 할머니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할머니들. 나라사랑을 다시 한번 내 가슴속에 새기고 2003년 나의 희망도 부처님에게 빌어 본다.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염취 난 무게 때문에 봉구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

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천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니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귀신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점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Homepage :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 중 일 통